


문 의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	과 장 서창대	042-481-5182
		사무관 장성국	042-481-5999
		주무관 임진혁	042-481-5964
		2020년 1월 7일(화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특허청,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!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지역소재 기업의 지식재산(IP) 인식제고 및 IP보호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지자체와 지식재산(IP)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 - 특히, 인천시, 대전시, 충북도, 충남도와 함께 IP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, 해당 지역 이외의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- 특허청·지자체 간 IP 보호 협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.
 -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하여 'IP 보호 지원 사업'을 우대 지원한다.

- ◎ 「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, 「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」 우선 지원
- ◎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
- ◎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,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(IP-DESK 연계)
- ◎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
- ◎ 기타 분쟁대응 우수사례,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 제공

-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는 'IP보호 지원 협의체'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.
-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IP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인식 및 사업 참여율 제고뿐만 아니라,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,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”고 평가하며,
 - “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,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이번 특허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자체 관계자는 “지역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허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만큼, IP 창출 및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해외 지재권 보호지원 주요사업 개요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주무관 임진혁(☎ 042-481-59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'해외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' 목적

-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

□ 사업별 주요 지원 내용**<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>**

- 개별 수출(예정) 기업에 분쟁 위험 조사·분석, 경고장 및 피소 대응, 라이선스 갱신, 권리행사 등 분쟁 단계별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

<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>

- 동종 기업 또는 동일 지재권 이슈를 보유한 수출(예정)기업 간 지재권 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

<해외 IP-DESK>

- 해외 현지에 설치된 IP-DESK를 통해 지재권(상표, 디자인) 출원,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상담 등을 지원

□ 우수지원 사례**(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례)**

- 국내기업 A사의 경우 액세서리 제조·판매 기업으로, 중국에서 여러 경로로 모방 상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, IP 분쟁 컨설팅을 신청했다. 우선 침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침해규모가 큰 중국의 3개 업체를 확정하고, 그들이 판매하는 모방상품과 침해규모를 분석하여 경고장을 발송했으며,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알리바바에 위조상품 거래 차단도 실시했다. 그 결과 침해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매출이 크게 신장(전년 대비 25% 증가)하는 등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.

(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사례)

-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B사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했으나, 이미 상표가 상표브로커에게 선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이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(53개사)과 대규모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업 공동으로 공통 피해증거, 공동탄원서 등을 제출했다. 그 결과 상대적으로 중국 내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다. 현재 50개사에 대해 무효선고를 받아냈고, 3개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.